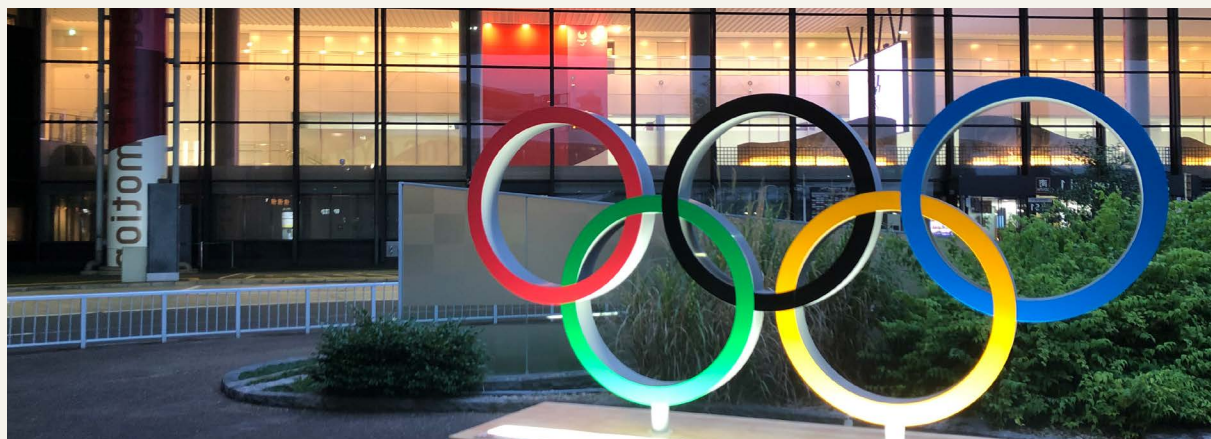


2020 도쿄올림픽 폐막을 지켜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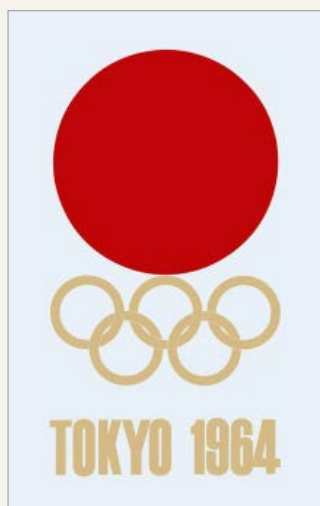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2020 도쿄올림픽 폐막을 지켜보며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홀수’ 년도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도쿄올림픽이 조용히 막을 내렸다. 고도성장기의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 ‘어게인 1964’를 기치로 내걸고 아시아 최초로 2회째 올림픽을 유치한 일본의 기획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대회 폐막 직후 일본 교도통신에서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올림픽 개최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지만, 장기간 코로나-19 우울증에 지친 일본인들에게 17일간의 ‘각본없는 드라마’로 감동과 위안을 선사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그동안 다년간의 행사준비과정과 개최기간 동안에 기지불한 비용 이외에, 지불유예로 미정산된 청구서까지 합산하면 이 유형·무형의 비용은 앞으로도 꽤나 오랫동안 일본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
2020년과 1964년 도쿄올림픽 포스터

21세기에 다시 한번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가부흥을 도모하고자 한 기획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작은 1989년 헤이세이(平成)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경제불황의 연속으로 인해 장기침체를 겪고 있었던 일본사회를 수도 도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는 곧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이라는 도쿄도(東京都)의 정책으로 표면화되었다. 국민들의 미온적 반응 속에서도 2008년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차 후보도시 선정에서 도쿄가 1위로 통과하자, 도쿄도는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켜 ‘평화·환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성숙한 대도시의 중심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 10월 제122차 IOC총회에서 개최지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결정되면서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 좌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잃어버린 20년’의 침울한 분위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일본열도를 엄습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사회는 삼시간에 SF소설 『일본 침몰』(1973)의 악몽을 연상시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킨다는 ‘재후(災後) 부흥’의 기획은 과거 1960년대 ‘전후(戰後) 부흥’의 성공 신화가 뇌리에 또렷이 각인된 기성세대 일본인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손쉬운 타개책이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2013년 9월 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도쿄가 2020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결정되었다. 앞선 2016년 대회 유치 시도 당시에는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 국민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이번에는 다수가 환호와 지지의 뜻을 드러냈다. 아마도 이 다테마에(建前)는 그만큼 3·11 이후 일본인들의 속내에 팽배한 위기감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쿄와 올림픽의 인연은 전전(戰前)인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은 당시 천황제제국이었던 일본의 ‘황기(皇紀) 2600년’으로, 제국 정부에서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皇統)’을 기념하고자 올림픽과 만국박람회라는 2개의 초대형 국제행사를 동시에 유치했다. 만국박람회 개최는 제국시대 일본의 국가적 비원(悲願) 중 하나로,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좌절을 경험한 끝에 드디어 1940년 만박(萬博)의 개최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당시 올림픽대회는 하계대회 개최국에서 동계대회까지 유치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어서 도쿄에 이어서 삿포로에서 1940년 하계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당시까지 단 한번도 서구열강의 지리적 권역을 벗어나서는 개최된 적이 없었던 3가지 초대형 국제행사가 최초로 극동의 섬나라 일본에서, 그것도 ‘황기 2600년’을 기념하여 한꺼번에 개최된다는 사실은 일본사회 전체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대사건이었다. 하지만 1939년 2차대전의 발발로 제국 일본의 국운을 흥성시키고자 했던 이 천재일우의 기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전과 일본제국의 패망 이후 연합군(GHQ) 통치체제 아래 놓이게 된 일본사회에서는 전후 평화헌법체제가 안정되자마자 1940년에 이루지 못했던 국가적 숙원사업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립국가로 재등장하기를 원했고, 도쿄도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기 폭격으로 폐허화된 수도의 면모를 일신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도쿄도는 1952년 5월 처음 올림픽 유치 의사를 표명했는데, 1959년 5월 뮌헨에서 열린 제55차 IOC총회에서 도쿄 개최가 공식 확정되었다. 직전 해인 1958년 제8회 도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가 IOC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도쿄도 당국은 즉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미증유의 메가이벤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주지하다시피 1964년 도쿄올림픽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올림픽으로, 전범국가로 패망하여 국제사회에서 불명예 퇴장했던 극동의 섬나라가 불과 십수 년만에 부활하여 선진자본주의 경제대국으로 복귀했음을 세계만방에 알린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까지의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인 94개국 5,586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 대회는 개막식을 올림픽 사상 최초로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하여 “기술올림픽”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으며,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태어난 사카이 요시노리(坂井義則)를 성화봉송 최종주자로 내세워 평화국가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치카와 콘(市川崑)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을 기록 영화로 담아낸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의 전설적인 작품 <민족의 제전(Fest der Völker)>(1938)에 버금가는 수작인 <도쿄올림픽(東京オリンピック)>(1965)을 통해 이 성공적인 역사적 이벤트를 영상으로 남겼다.

하지만 일본의 전후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린 메가이벤트가 1964년 도쿄에서만 개최된 것은 아니다. 전전에 ‘하나의 세트’로 기획되었으나 일거에 좌절되었던 비운의 1940년의 3개의 초대형 국제행사는 ‘1964 도쿄—1970 오사카—1972 삿포로’를 통해 시리즈로 실현되어 전후 화려하게 부활한 일본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고도성장기인 1955~1973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명목으로는 15%, 실질로도 10%대를 유지했으며, 경제 규모는 5.8배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서구 선진국들의 명목성장률이 6~9% 정도였음을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급격한 것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3·11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아 물러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돌려받아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의 탈출에 사활을 건 아베 정권(2012.12~2020.9)이 어찌 이 만병통치약 같은 마법의 주문을 외면할 수 있었으랴! 2020년 올림픽 유치권 획득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아베 정권이 회심의 승부수로 재추진하여 얻어낸 성과물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베 정권은 과감한 금융 완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감세와 규제 완화를 정책의 3대 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분배 위주 정책에서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재선회로 특징지어지는 아베노믹스의 추진 결과, 지속적인 산업정책과 규제 완화, 통화 공급과 엔저 효과 등으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일부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청년고용이 증가하는 등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가계경제보다는 기업경제를 우선시한 개혁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미중 통상분쟁의 본격화로 인한 세계경제 하강과 소비세 인상은 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켰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열도를 찾아온 팬데믹이라는 불청객이 결정타를 가했다.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은 애초의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하계올림픽 중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대회가 되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1년 연기되면서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올림픽 관련으로 들인 돈은 도쿄도 1조4,519억 엔, 중앙정부 1조3,059억 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7,060억 엔을 포함하여 최소 3조4,600억 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림픽 유치 입찰 당시 제출한 예산 8,000억 엔의 4배가 넘는 수준이며, 직전 대회인 리우올림픽에 들어간 137억 달러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매회의 올림픽마다 ‘진정한 승자’였던 IOC가 올림픽 중계권료로만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반면, 기대했던 해외 관광객 수입은 물론 무관중 경기로 인해

입장권 수입조차 전혀 올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대회를 강행해야만 했던 일본은 미미한 경제적 효과를 위안 삼아 천문학적 적자를 감당해야만 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이 비용에는 올림픽 주경기장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1935년 개시(開市) 이래 도쿄 주민들의 부역을 책임져왔던 역사적 명소인 쓰키치(築地) 시장을 하루아침에 철거하고, 토양오염이 심각한 도요스(豊洲)로 식자재 시장을 이전시키는 등 졸속한 반달리 증적 정책에 의해 초래된 사회문화적 손실은 합산되지도 않았다.

도쿄올림픽 폐막을 씩씩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문득 100년 전인 1921년 11월 도쿄역 앞에서 19세 청년의 칼에 맞아 절명한 ‘평민 재상’ 하라 다카시(原敬, 1856~1921)가 떠올랐다. 흔히들 그의 최후는 강고한 군벌체제를 넘어서지 못한 정당정치 of 죽음의 상징하는 것으로 회자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표층적 사건의 격동이 무색하리만치 일본정치의 이면은 언제나 다른 힘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하라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일본정치는 금권정치 시대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전후 평화헌법체제 하에서까지도 세인들로 하여금 고인이 된 하라 다카시를 회상하게끔 만든 것은 전후 체제에서도 ‘정치의 빈곤’이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하라의 충격적인 죽음이 심층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표층의 파도에 불과했듯이,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의 잘못된 판단의 연속으로 인해 증폭된 이번 도쿄올림픽의 부정적 효과도 거함 일본의 향로에는 별달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올림픽에 의해 초래된 천문학적 빚더미와 끝나지 않은 ‘팬데믹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금융자산 보유국이자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쉽사리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자나라’에 자부심을 가진 ‘가난한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줄곧 경제적 이해타산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정책 결정의 최종심급으로 작용해온 ‘경제 동물’ 일본의 근본적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본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